제356회 임시국회
업 무 보 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 1. 31.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목 차

Ⅰ. 일반 현황 ····· 1

1. 설립 목적 및 연혁 ····· 3

2. 조직 및 정원 ····· 4

3. 주요 업무 및 가입자 현황 ····· 5

4. 재정 현황 ····· 6

5. 2018년도 예산 현황 ····· 7

Ⅱ. 2018년도 중점 추진업무 ····· 9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 11

2.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차질없는 이행 ····· 15

3. 치매 국가책임제 실행 지원 ····· 16

4. 미래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 18

5.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기관 ····· 19

Ⅰ. 일반 현황

1. 설립 목적 및 연혁

2. 조직 및 정원

3. 주요 업무 및 가입자 현황

4. 재정 현황

5. 2018년 예산 현황

1 설립 목적 및 연혁

❑ 설립 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 가입자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및 보험재정 등을 관리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임

❑ 주요 연혁

○ 1977. 7. 1. … 최초 의료보험 실시(종업원 500인이상 사업장)

○ 1988. 1. 1. …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

○ 1989. 7. 1. … 도시지역 확대로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 2000. 7. 1. …「국민건강보험공단」출범

○ 2008. 7. 1. …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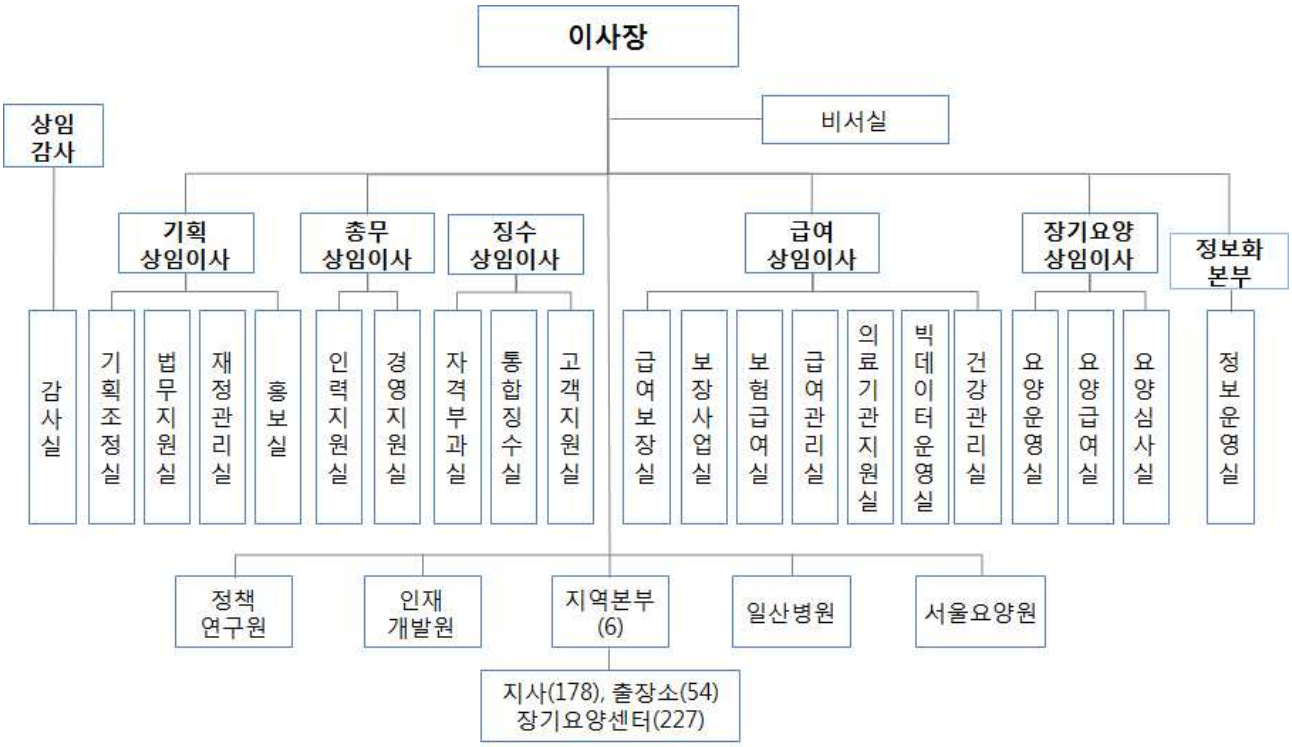
○ 2011. 1. 1.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2 조직 및 정원

❑ 조직

○ 본부(21실 1본부 2원), 지역본부(6), 지사(178), 출장소(54)

-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별도 운영



❑ 정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13,894명

'18.1.1.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	임원	1급	2급	3급	4급이하	연구/기능
계	13,894	100.0	7	127	561	2,276	10,822	81/20
건강보험	10,233	73.7	6	122	459	1,769	7,800	58/19
장기요양	3,661	26.3	1	5	102	507	3,022	23/ 1

○ (소속기관) 일산병원 1,339명, 서울요양원 80명

3 주요 업무 및 가입자 현황

❑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 가입자(외국인 포함) 자격관리 ◈ 지역 및 직장 보험료 부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지 및 징수
보 험 급 여	◈ 수가계약 및 약가협상 ◈ 급여비용의 지급 및 급여사후관리
건강검진 및 증진·예방	◈ 질병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 급여비용 심사·지급관리 및 기관 평가
기관 운영사업	◈ 재정(자산) 관리, 의료(요양)시설 운영 ◈ 조사연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
정부 수탁사업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공무상 요양비 지급 등 21개 수탁사업 수행

❑ 가입자 현황('17.12.31.현재)

건강보험

◈ 총 가입자 : 5,094만명

※ 외국인(재외국민) 91만명 포함

◈ 직장가입자 : 3,690만명(72.4%)

- 가 입 자 1,683만명
- 피부양자 2,007만명

◈ 지역가입자 : 1,404만명(27.6%)

- 세 대 주 654만명
- 세 대 원 750만명

장기요양보험

◈ 65세이상 노인 : 731만명

※ 전체인구의 14.0%

◈ 등급인정 : 58만명(노인의 8.0%)

- 1등급 4만명(인정자의 7.4%)
- 2등급 8만명(13.6%)
- 3등급 20만명(33.5%)
- 4등급 22만명(38.3%)
- 5등급 4만명(7.2%) … 치매등급

◈ 서비스 이용 : 49만명

※ 등급인정자의 85.0%

4 재정 현황

❑ 2017년도 재정 현황(12월말 현재)

○ (건강보험) 당기수지 7,077억원 흑자, 누적수지 20조 7,733억원

- 정부지원금 감소(△3,136억원)와 요양급여비용 증가(8.8%) 등으로 전년대비 당기수지 흑자 2조 3,779억원 감소

○ (장기요양보험) 당기수지 3,293원 적자, 누적수지 1조 9,799억원

- 보험료수입 증가율을 2.5배 상회하는 요양급여비 증가로 전년대비 당기수지 적자폭 확대('16년 432억원 적자 → '17년 3,293억원 적자)

< 2017년말 기준 재정 현황 >

현금흐름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7.12월말 현재		2016.12월		2016년 대비증감			
		건강보험 (A)	장기요양 (B)	건강보험 (C)	장기요양 (D)	건강보험 A-C	(%)	장기요양 B-D	(%)
수입	계	579,990	50,846	557,195	46,635	22,795	4.1	4,211	9.0
	보험료 수입	500,099	32,330	473,065	30,506	27,034	5.7	1,824	6.0
	정부 지원금	67,839	17,891	70,975	15,298	△3,136	△4.4	2,593	16.9
	기타수입	12,052	625	13,155	831	△1,103	△8.4	△206	△24.8
지출	계	572,913	54,139	526,339	47,067	46,574	8.8	7,072	15.0
	보험(요양) 급여비	555,374	51,127	510,541	44,120	44,833	8.8	7,007	15.9
	기타지출	17,539	3,012	15,798	2,947	1,741	11.0	65	2.2
당기수지		7,077	△3,293	30,856	△432	△23,779		△2,861	
누적적립금		207,733	19,799	200,656	23,092				

5 2018년 예산 현황

❑ 총 70조 6,162억원 … 전년 대비 12.2% (7조 6,758억원) 증

○ (건강보험) 63조 3,199억원(89.7%)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A)	2017년(B)	증감(A-B)	%
계	633,199	571,633	61,566	10.8
일 반 회 계	630,006	568,880	61,126	10.7
특별회계(일산병원)	3,193	2,753	440	16.0

- **수입**: 보험료(53조 3,158억원, 84.2%) ⊕ 정부지원금(7조 6,160억원, 12.0%) ⊕ 부당이득징수금 등(1조 1,863억원, 1.9%) ⊕ 이월잉여금(1조 2,018억원, 1.9%)
- **지출**: 보험급여비(60조 9,420억원, 96.2%) ⊕ 관리운영비 등(2조 586억원, 3.3%) ⊕ 특별회계(3,193억원, 0.5%)

○ (장기요양) 7조 90억원(9.9%)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A)	2017년(B)	증감(A-B)	%
계	70,090	54,839	15,251	27.8
일 반 회 계	70,042	54,795	15,247	27.8
특별회계(서울요양원)	48	44	4	9.1

- **수입**: 보험료(3조 8,525억원, 55.0%) ⊕ 국고지원금(7,121억원, 10.2%) ⊕ 국가·지자체 의료급여부담금(1조 4,062억원, 20.0%) ⊕ 이월잉여금 등 (1조 382억원, 14.8%)
- **지출**: 요양급여비(6조 6,220억원, 94.5%) ⊕ 관리운영비(2,390억원, 3.4%) ⊕ 주요사업비 등(1,104억원, 1.6%) ⊕ 예비비(376억원, 0.5%)

○ (사회보험 통합징수) 2,873억원(0.4%)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A)	2017년(B)	증감(A-B)	%
통합징수	2,873	2,933	△60	△2.0

- **수입**: 사회보험별 분담금(건강보험 1,889억원, 국민연금 690억원, 산재보험 145억원, 고용보험 148억원) ⊕ 석면피해구제기금(1억원)
- **지출**: 관리운영비(1,966억원) ⊕ 주요사업비 등(803억원) ⊕ 예비비(104억원)

Ⅱ. 2018년도 중점 추진업무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2.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차질없는 이행

3. 치매 국가책임제 실행 지원

4. 미래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5.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기관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1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 정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수립 지원

- 최근 비급여 상세내역 자료를 분석하여 비급여 규모 등 검토
- 치과 비급여 등 급여 필요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의료계 및 학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급여확대 로드맵 지원
-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재정영향, 부담 감소효과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여 정책에 환류

○ 국민참여위원회* 제도화로 급여우선순위 결정에 국민 의견 반영

-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을 보완하여 국민의견 반영 절차로 활용
- 시행령(또는 고시)에 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시 급여우선순위 논의 정례화 등 검토('18년)

* 건강보험 적정보장수준 및 재원부담('17.9월), 등재비급여 급여우선순위('17.11월) 등 '12.9월부터 7회 개최(비정기, 일반국민 대상으로 인력풀 90명 모집)

○ 비급여 발생 차단 및 관리 강화

-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을 지원하여 신포괄수가제 확대 기반 조성
- 공·사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연구 및 정부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 지원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참여 현황) 400개소, 26,381병상('17.12월 기준)

('13) 13개소 1,423병상 → ('14) 28개소 2,363병상 → ('15) 112개소 7,443병상 → ('16) 300개소 18,646병상 → ('17) 400개소 26,381병상

○ (급여비) ('15) 4.8백억원(9만명) → ('16) 26백억원(42만명) → ('17.11) 52백억원(62만명)

○ '22년까지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정부 정책 지원
- 지역본부 전담조직을 활용한 현장 밀착형 홍보·컨설팅 강화로 의료기관 참여 독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3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난임치료 시술비 급여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부터 급여화('17년)

대상	시기	보장성 강화 내용('17년)
아동	1월	• 조산아, 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 30~60% → 10%
	7월	• 치석제거 대상연령 확대 : 20세이상 → 19세이상
	10월	• 15세이하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 10~20% → 5%
노인	10월	•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20~60% → 10%
		• 고가 치매 진단검사 보험급여
	11월	•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 50% → 30%
여성	1월	• 산전진찰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 30~60% → 10~40%
		•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인상 : 70만원 → 90만원
	10월	• 난임치료 시술비 보험급여

○ 노인 임플란트 등 본인부담 인하 추진('18년~)

- (임플란트)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18.7월)
- (요양비)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의 양압기 대여료 지원

4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 하향('18.1월)

(1분위) 122만원 → 80만원, (2~3분위) 153만원 → 100만원, (4~5분위) 205만원 → 150만원

※ 단,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자는 현행 상한액 유지

○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연소득 20% 초과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50% 지원(연간 최대 2천만원) … 시범사업('18 상반기) → 제도화('18.7월)

- 기존 한시적 지원사업('13~'17)에 비해 대상 가구 및 질환 확대*

  * 중위소득 80% 이하 → 100%이하 가구, 4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

- 지원기준 미충족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 후 선별 지원

  *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액이 기준에 다소 미달하는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나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등

-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등에 따라 추가 지원*

  * 고가 약제 복용에 따라 약제비 부담이 큰 경우, 질환특성으로 인해 2천만원 지원만으로는 빈곤화 위험이 큰 경우 등

- 의료비 중복지원 및 누락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연계

5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

○ (언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내용 전달

- 기획기사, 기고, 기자간담회・언론 브리핑 개최(의견수렴 등) 등

○ (방송) 방송사와의 친밀도 유지로 안정적인 채널 확보, 홍보방안 공유

- 시사·교양 등 인지도 높은 방송(TV, 라디오) 프로그램 활용

○ (뉴미디어) 모바일 중심 콘텐츠 다양화 등 온라인 홍보 비중 확대

- 공단 보유 플랫폼(SNS,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TV 등), 온라인광고 등

○ (현장 홍보) 전국 인프라 활용, 여론주도층 대면 홍보*로 이해도 제고

  *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여론 주도층 대면 홍보 … 분기별 2,700명

6 적극적 재정 관리로 보장성 강화 재원 확보

○ 재정지출 규모 및 전망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8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정책협의회' 참여로 중기재정전망 공통 추계 및 재정개선 과제 검토
- 예상 수입·지출대비 실적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 자격관리 강화 및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수입기반 강화

- '체납보험료 감축관리 추진반' 운영으로 지사 징수활동 활성화*

  * '16년도말 체납액(12.6조원)의 15.4% 징수 … 1조 9,440억원

-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납부능력자(고소득·전문직) 특별관리*

  * (건강보험) 6만세대, 1,541억원, (연금보험) 19만명, 7,656억원

- 허위취득 개연성 높은 직장가입자 발췌(19개 유형) 및 현장조사를 통해 허위취득 확인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보험료 소급 부과*

  * 연평균 1,765명 적발, 지역보험료 70억원 추징('13~'17년)

○ 부적정 지출 관리로 재정누수 방지

- 급여관리시스템(BMS)*을 운영해 부당청구 의심기관 모니터링

  * 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부당청구 의심건을 분석하는 시스템(119개 모형)

- 유관기관(수사기관, 금감원 등) 과의 업무공조*로 부당청구 적발 강화

  * 검찰 사건처분결과 통지 제도화, 보험사기 공동 기획조사 등

-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등) 행정조사 대상 기관을 '17년 대비 30%(161개→210개) 확대하여 적발 강화*

  *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요양병원 및 면대약국 중점 조사 추진

○ 급여비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 중장기 지출효율화 과제 발굴 연구 수행(~'18.6월)으로 예방증진 사업, 약제관리 등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발굴

2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차질없는 이행

1 1단계 개편('18.7.1.)의 안정적 이행

○ 관련 지침 정비 및 정부 주관 위원회 운영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고시 제·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및 전산매뉴얼 개정('18.2월~)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운영 지원*('18.7월~)

  * 1단계 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2단계('22년) 개편 시 반영

○ 전산프로그램 조기 개발 완료 및 안정화(~'18.6월)

- 개편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정확히 산정·부과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 개편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전산 교육 실시('18.2월~)

- 설명자료(Q&A 등) 배부 및 직원 대상 설명회 및 직무교육 등

2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홍보/민원대책 마련

◇ (배경) 제도 개편('18.7.1, 1단계 시행)에 따른 일시적 민원 및 문의 증가가 예상됨
- 보험료 인상세대, 피부양자 탈락자, 보험료 한시적 경감 등 제도 변경사항

○ 홍보/민원대책반 구성·운영('18.3~9월)

- 개편내용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긍정적 여론 조성
- 본부-지역본부-지사 간 유기적인 민원 대응체계 구축

○ 상담사, 직원 등 역할 분담으로 단계별* 민원대응('18.5월~)

- 보험료 인상, 피부양자 탈락 예정 세대 등 사전 안내(상담사) 및 추가 상담(직원)을 통해 개편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안내

  * 1차 안내(상담사) → 2차 상담(직원) → 3차 장시간 및 불만 민원(전문상담사)

○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국민 이해도 제고('18.2월~)

- 개편의 의미, 개선되는 내용 등을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3 치매 국가책임제 실행 지원

1 인지지원등급 신설로 치매가족 수발부담 완화

○ 인지지원등급 신설('18.1월) … 시행령 공포('17.12.26.)

- 신체적 기능 상태와 관계없이 치매질환자 모두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 … 치매질환여부는 진단서로 확인

  * 최근 2년간('15~'16) 치매진료·투약이력 있는 자 중 미신청자와 등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목표 설정

- 등급판정 시 주야간보호서비스(월한도액 517천원) 등 이용 가능

  * 인지지원등급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복지관 시범사업('17.12~'19.1)

2 치매관련 경제적 · 심리적 부담 경감

○ 장기요양 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 저소득층 중심의 본인부담 경감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

  * (현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50% 경감
    (변경)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60% 경감, 중위소득 51~100%: 40% 경감

- 경감 확대에 필요한 법령 및 고시 개정 추진('18년 상반기)
- 입소시설 식재료비 급여화 및 복지용구(기저귀 등) 품목확대 검토

○ 집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방문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하여 교육상담·치매돌봄 제공(간호사, 최초 2개월간 4회)
- 통합(요양+목욕+간호+상담) 재가 서비스('18년 시범사업, '19년 본사업)

○ 수급자 가족의 심리적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대

- 상담 전문인력*이 개별상담, 집단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상담, 응급상황 대응 등 서비스 제공 … 30개 운영센터, 대상자 약 1,000명

  * 정신건강 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3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교육 강화로 서비스 질 제고

○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원활동 강화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월 4~7만원, '17.10월~)
-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연중 실시

  * (홍보방향)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효 나누미', 국가자격의 전문인력 등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종사자 직무교육 내실화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470개)의 교육실시 및 진행사항 관리 강화(4~12월)
-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교육 대상 확대
-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확보(2~12월)

  *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등 '22년까지 치매서비스 전문인력 134천명 양성

4 장기요양 재정관리 강화

○ 재정분석 강화로 합리적 수준의 보험료 인상 등 정책결정 지원

- 노인인구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출 예측
- 국고지원금 증액 논리 개발 등 관계부처 협의 강화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예방 추진

- 청구 그린기관 300개소로 확대 … ('17년) 200개소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 의무화 추진 … '18년 법안 마련
- 부당청구 사전예방 교육기관 6,000개소로 확대 … ('17년) 4,774개소

○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 수사기관 협업* 확대(2~11월)

- 공익신고 활성화로 국민 감시기능 강화 … 보도자료 배포, 종사자교육 등
- 부당규모가 크거나 조사방해 기관에 대해 검·경찰 합동 조사

  * 공단-검찰청 현지조사 업무 협업을 위한 간담회 정례화(반기)

○ 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장 확인심사 확대

- 청구내용 확인심사 확대 700개소 … ('17년) 500개소 대비 40%↑

4 미래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1 미래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확대

○ 만성질환 관리체계 개선 지원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복지부), 만성질환 수가시범사업(공단) 등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개선모형 구축 지원*

  * ('18년) 건강동행센터 확대 지원(공단 7개소)

○ 지역단위 묶음지불제도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행위별수가제 외에 다른 지불제도 모형 연구*

  * 공급자-연구자 공동 참여 연구용역 추진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노인 의료-요양 연계체계 구축

- 복지부 전담 T/F 운영 지원 및 관련 연구 추진

○ 지역사회 기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기능정립방안 연구

- 경증치매수급자 특성에 맞춘 공동생활가정 운영 모델 제안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보급 확대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취약계층(1인·다문화가구 등) 건강분석 및 서비스 모델 개발

○ 플랫폼 기반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확대

- 원격 연구·분석 지원*, 지역별·사업장별 건강지표 제공 등 다방면으로 빅데이터 활용 지원 … 플랫폼 오픈('17.7월)

  * 심평원과 빅데이터 개방 공동기준 마련으로 민간보험사 자료 제공 차단

○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부정책 지원

- 임신출산 관련 빅데이터 분석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지원 강화*

  * 소득수준별 난임시술 및 임신율 분석을 통해 난임시술 급여화('17.10월) 근거 제공

- 의료이용지도 구축('18년 완료)으로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 지원

5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기관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

○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 '일자리 위원회*' 신설·운영('17.12월) … 기존 일자리창출단(T/F) 확대

  *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노동조합 대표 등 참여

- (기간제 전환대상 57명) 전환 채용 완료('17.12월)
- (파견·용역 전환대상 393명) '노사 및 전문가협의기구'를 본격 운영('18.1월)하고, 계약만료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주관)* 적극 추진

  * 사회보험료 대납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

2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선도

- '가족과 함께하는 날' 조기퇴근제 도입 … 월 1회 → 월 2회('18.1분기)
- 임신 직원 단시간근무 확대 … 임신 12주초과~36주미만('18.1분기)
- 근로시간외 업무 지시 금지 등 시행 … '18.2월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08.12월~) … '17.11월말 현재 1,709억원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기본 50만원)

○ 임신근로자 보호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협업사업)

- 휴직제도 안내(SMS), 임신근로자 사업장 정보 제공 등 지원

3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협동조합 관리

○ 의료협동조합의 올바른 제도 정착 계도

- 불법 의료협동조합은 퇴출시키고, 주민자치 의료 활성화 등 의료협동조합의 순기능이 회복되도록 정책 지원

4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강화('18년)

- '원주시와 함께하는 건강도시 만들기(가칭)',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
- 찾아가는 빨래봉사(50회), 집수리봉사(15회)

○ 의료봉사 등 공단만의 특화된 사회공헌 지속 추진

- 찾아가는 의료봉사(34회), 해외 봉사(1회), '치아사랑' 봉사(34회) 등

5 취약계층 보호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연체요율(현행 최대 9%)과 신용카드 납부수수료(현행 0.8%) 인하 추진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단 지자체(14개) 원상회복 추진

*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보험료 월 1만원 이하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 보험료 지원

○ 은퇴자 부담경감을 위한 임의계속가입기간(24개월 → 36개월, '18.1월), 가입 대상('18.7월) 확대

○ 장기체납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정리(10년 이상 체납 20만 세대, 960억원) 하고, 결손처분 기준 확대*로 생계형 체납자 의료권 보장

* 기존 무재산·무소득 → 100만원 이하('17.10월)

6 직영 병원 · 장기요양시설 운영으로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

○ (일산병원) 건강보험 모델병원 역할 적극 수행

- 임상·원가 기반의 보험수가 및 급여적정성 분석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공단 등에 정책자료 651건 제공(~'17.10월)

- 정책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응급・감염관리센터 확충(~'19.7월)

* 신포괄수가 시범사업('09.4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13.7월~) 등

○ (서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확대 및 급여비용 적정성 분석

- 시설급여・주·야간보호 운영에 이어 재가급여사업 실시('18.7월~)
- 급여비용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원가분석(~'18.12월)